

이 대통령 “한중 관계 복원 원년…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만남…리창 “협력 확대해 성과 거둘 용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하면서 “어제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민생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께서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 하면서 민생 안정을 담당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각 리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 총리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웃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양측이 각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구체적 계획을 지도했다”며 “또 이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중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한국과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샤오미 폰으로 “김~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박지원 “선당후사…김병기 탈당해야”

직접 전화걸어 권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의원은 6일 최근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강조하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동강빌딩 7층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2026 정국 전망’ 초청 특강 연사로 나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는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탈당을 권유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김 의원의 결백을 믿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당후사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탈당에 경찰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은 뒤 당당히 돌아오는 것이 아내와 두 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당에 부담이 안기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

정해 최고위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장철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의혹을 해명한 점을 거론, “일단 당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소명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제명’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당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절차를 비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숙박권(항공사 제공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소명하겠다고 하니 조사와 수사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의혹이 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김 의원을 두고 제기된 금품거래 의혹은 2020년 총선 및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맞물려 있는데, 이를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으로 키워선 안 된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이병훈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분산 배치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에너지 자원 갖춘 호남이 최적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용인 집적화’ 주장을 반박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호남 분산 배치론’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한 곳에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크다”며 “미국과 대만 등 선진국이 이미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직시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용인 지역 정치권과 언론이 주장하는 ‘남방한계선’ 논리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마당에 국내에서 지리적 한계를 긋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도권이 드는 송전망 확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수반되는 수도권 대신, 한빛원전의 기저전력과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갖춘 호남이 아말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무역장벽을 넘을 최적지라고 진단했다.

이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조 5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파운드리’의 광주·전남 유지를 촉구했다.

그는 “공공 영역인 상생 파운드리가 호남에 등지를 틀면 민간 기업의 팍(공장) 투자가 뒤따르며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나주 인공태양 연구 기반과 지역 대학의 인재 풀을 결합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지 재검토 시사는 정치적 개입이 아닌 에너지 전환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치적 선택을 배제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조류충돌 위험 높은 시간대 최소 인력 근무”

김문수 의원 자료…최근 5년간 조류충돌 사고 55% 오전 9시 이전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이 6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런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인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